

19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습목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숙지한다.

■ 학습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내용을 알아보고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핵심용어(용어사전)

준용 : 입법기술의 한 방법으로서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

간주 :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

추정 :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 사례 :

<사건의 개요>

K도가 설치·운영하는 S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는 위 학교 축구부원으로 활동하였는데, 6월 경에 D시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축구부 감독인 B, 축구부원인 학생 38명 등과 함께 'H휴양림'에 투숙하였다.

나. B는 T학교와의 시합을 마친 후, 상대팀의 축구경기를 관전하기 위하여 C코치에게 학생들을 데리고 먼저 숙소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였는데, C는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B에게 전화하여 자신도 축구경기를 관전하기 위하여 경기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학생들만 위 휴양림으로 돌려보낸 후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다.

위 휴양림 인근에는 수심이 약 40m에 달하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숙소로 돌아와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산책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하다가 저수지 가에 고무보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A를 포함한 학생들 몇몇이서 고무보트에 매어져 있던 밧줄을 저수지 가의 나무에 묶어 보트가 너무 멀리까지 가지 않도록 한 다음 위 보트를 저수지에 띄워 물놀이를 하였다. 그런데 3학년생 중 평소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동급생들을 괴롭히던 D가 같은 축구부원 동급생으로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E를 놀려주기 위하여 A, E를 포함하여 보트를 타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돌을 던져 보트를 저수지 가운데 쪽으로 움직여 가게 한 다음, 보트와 나무를 연결하고 있던 밧줄을 풀고는 보트에 타고 있던 학생들을 향하여 E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수영을 하여 물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재촉하자, A는 수영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해서 저수지 가로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수영미숙으로 익사하였다.

A의 부모 및 형은 B 및 K도(교육감)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A의 부모 및 형의 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순차로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룰 수 있을 뿐인지 아니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결말>

B는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40명 가까운 학생들의 인솔자로서 축구대회 기간 동안 학생들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고, 더욱이 숙소 인근에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데다 당시는 6월 중순으로 여름의 초입 무렵이었던 점, 학생들의 수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학생들을 감독자 없이 방치할 경우 학생들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학생들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전장구를 구비하여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의 일환인 축구대회 참가 또는 이와 밀접 불가분의 생활관계에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B 및 K도(교육감) 및 학교안전공제회는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의 부모 및 형의 청구는 타당하다. 다만,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던 A로서도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고, A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B 및 K도(교육감)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전문가의 의견>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제59조 내지 제64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자 중 위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심사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후 그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심사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법 규정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학습>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가. 제정 배경

종전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기준이 시·도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법률적인 재정지원의 뒷받침 없이 상호부조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있어 학교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공적인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하고,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기금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실질적인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나. 목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발생을 억제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새 법률이 제정된 목적을 두었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 피공제자의 범위 확대 및 전국적인 통일 기준 마련

새 법률에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학교·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피공제자로 규정하여 피공제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 등 필요한 대책을 규정하며 공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공제로 산정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나. 공제급여의 보상범위 확대

새 법률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대상을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에서 간병급여, 장의비까지 확대되어 공제급여의 종류가 많아졌다.

다. 공제로 책정

공제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면, 고시된 공제로 산정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학교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료를 산정한다. 그리고 산정 후 책정된 공제료를 공제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차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라.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공제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힘썼다. 그리고 불복절차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대상

가. 보상금의 개념

‘보상금’이라 함은 관할내의 각급 회원학교에서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 폐질급여, 사망위로금과 학생사고와 관련하여 교직원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법률적 손해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나. 보상대상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요양급여(제36조)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 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까지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였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둘째,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셋째,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사기재료로 이 빗깍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넷째,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섯째,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여섯째, 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일곱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장애급여

장애급여(제37조)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애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애급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국민의 평균여명·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과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3) 간병급여

간병급여(제38조)는 제36조의 규정에 다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도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된다고 규정하였다.

(4) 유족급여

유족급여(제39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호적상 가(家)를 달리 하였던 자녀도 포함하여 지급한다.

(5) 장의비

장의비(제40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자료는 신체장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노동력 100%를 상실했을 때와 사망의 경우 피해자 본인일 때가 최고 2천만원으로 나타나 있었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하고 중간 이자 공제 방식은 법정 비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공제급여의 청구 등

가.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나.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 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공제급여의 제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라.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부당이득의 환수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5.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가. 심사청구의 제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正本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 재심사청구의 제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正本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마.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규정(법제 59조)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바. 재결의 효력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사. 시효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정리하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하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義肢)·의치(義齒),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이 포함된다.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하며,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正本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제59조 내지 제64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자 중 위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심사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후 그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심사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법 규정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평가하기

문제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진찰·검사가 포함된다.
-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이 포함된다.
- (3) 재활치료
- (4) 의치(義齒)는 포함되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은 제외된다.

해설 : 정답 (4)

요양급여의 범위는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義肢)·의치(義齒),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이 포함된다.

문제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제급여의 청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 (4)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3)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제급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2)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3)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